

2023. 12. 18.(월)

인천형 출생정책 대전환의 시작 「1억⁺ i dream」

언론 브리핑 자료(배포용)



인천형 출생정책 대전환의 시작 「1억⁺ i dream」

□ 추진배경

-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.7명 기록
- 우리나라 가족예산중 아동수당, 육아휴직급여 등의 현금지급 기준이 GDP 대비 0.32%로 OECD 평균(1.12%)의 30% 수준(2019년 기준)
-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 등 영유아기 집중 투자로 아동기·청소년기 지원 정책과 격차 심화, 학령기 이후 ‘돌봄’, ‘교육’ 수요로 인한 지출부담에 대한 대응 정책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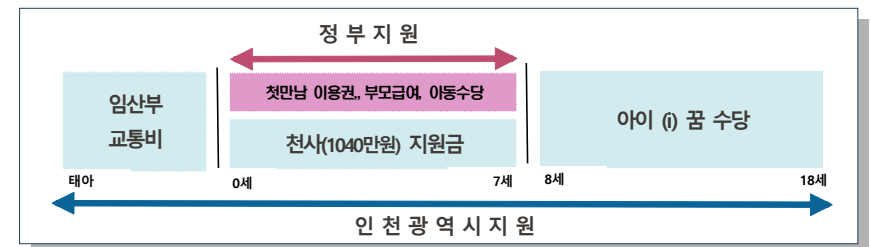
□ 기본 방향

- (18세까지 중단없는 지원)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하여 중단없이 지원하는 ‘인천형 출생 정책’ 마련, 향후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확대·전환

* (영유아기 현금성 지원) 총 2,960만원 / 8세 이후 현금성 지원 단절

- 0세 첫만남이용권(200만원), 0세~1세 부모급여(1,800만원), 0세~7세 아동수당(960만원)

⇒ 인천에서 태어나면 모든 아이(i) 1억, 플러스 3.4억원까지 지원



- (정부 출생정책의 대전환 촉구) 인구정책 전담조직 신설,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,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제도 신설,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, 이민정책 등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

□ 주요 내용

- (누구나 1억원 지원) 「1억+ i dream」은 기존의 부모급여, 아동수당, 보육료, 초·중·고 교육비 등의 지원(7,200만원)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(840만원), 아이(i) 꿈 수당(1,980만원), 임신부 교통비(50만원) 등 2,800만원을 추가하여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(i)에게 1억원 지원

기존(72백만원)		확대·보완(28백만원)		모두 1억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(1) • 첫만남이용권 (2) • 부모급여 (18) • 아동수당 (9.6) • 보육료, 급식비 (25.4) • 초·중·고 교육비 (16.5) 	+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사(1040만원)지원금 (8.4) • 아이(i) 꿈 수당 (19.8) • 임신부 교통비 (0.5) 	⇒	

※ 천사(1040만원)지원금과 아이(i)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

- * (천사(1040만원) 지원금) 총1,040만원(첫만남200포함), '23년생부터, 1세~7세, 연 120만원
- * (아이(i) 꿈수당) 총1,980만원, 8세~18세, 연 180만원(월 15만원), 단계적 증액
- * (임산부 교통비) 1회 50만원 임신부 주유비, 주차비, 택시요금 등

- (18세까지 확대 지원) 8세이후 중단된 아동수당을 끊임없이 '아이(i) 꿈 수당'으로 18세까지 확대하여 지원
-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원하되, 우선, 내년('24년도)에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액(월 5만원 → 10만원 → 15만원)하여 지원

- * 2016년생 ~ 2019년생 월 5만원 (총 660만원) * 2024년 부터
- * 2020년생 ~ 2023년생 월 10만원 (총 1,320만원) * 2028년 부터
- * 2024년생부터 월 15만원 (총 1,980만원) * 2032년 부터

- (개인별 맞춤형 3.4억원까지 지원)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지원, 결식아동 급식비,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도 발굴하여 최대 3억4천만원까지 지원

□ 중앙정부 정책 건의

- (대한민국 출생정책의 대전환 강력 건의) 인구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국가 정책의 큰 변화 필요,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 촉구

- 출생 정책의 혁신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조직 정비
 - 대통령실에 가칭 '인구정책 수석'을 두고,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전담부처 가칭 '인구정책처' 신설
- 산발적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
 - 보조금 제도의 구조 조정을 통한 '통합 출생 지원금' 체제로 전환
-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제도 신설
 -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
-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
 -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
-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
 -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